



KOTRA 워싱턴 D.C.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▣ 주요 내용

⌚ 워싱턴 D.C. 포커스

- (광물) 실버라도 정책연구소, 전략광물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2
- 중국 독점에 대응한 동맹국 협력 공급망 구축과 기술 자립 강화를 위한 전략광물 안보정책 제시

₩ 경제통상 동향

- (셧다운) 美 연방정부, 양당 교착으로 셧다운 장기화 및 경제 불확실성 심화 5
- (관세) 트럼프 대통령, 수입 중·대형 트럭 25% 관세 전격 부과 발표 6
- (의약품) 美 상원의원, 외국산 제네릭·원료의약품의 232조 관세 확대 제안 7
- (무역)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(CPA),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한 연대 출범 8

⚖️ 의회법안 동향

- 중국 견제, 청정에너지 등 발의 2건 9

💬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10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1

▣ 워싱턴 D.C. 주요일정

10.9(목)	• 10월 1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(Initial jobless claims)
10.10(금)	• 9월 미 월간 연방재정수지(Monthly U.S. federal budget)
10.14(화)	• 9월 미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(NFIB optimism index)
10.15(수)	• 9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(Core CPI)

◎ 워싱턴 D.C. 포커스

(광물) 실버라도 정책연구소, 전략광물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

1. 개요

□ 실버라도 정책연구소, 상무부 핵심 광물 232조 조사에 의견서 제출

- 워싱턴 D.C. 기반 싱크탱크 Silverado Policy Accelerator*는 지난 4월 상무부의 「가공 전략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(Section 232 Investigation)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

* 실버라도 정책연구소는 경제안보·기술혁신·산업정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 연구와 정부 자문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로, 국방부와 상무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참여

□ 중국 광물 공급망 지배 전략에 대한 경고와 미국 산업·무역정책의 방향 제시

- 조사 범위에는 희토류, 갈륨, 저마늄, 흑연, 안티몬 등이 포함되며, 중국의 공급망 독점 및 수출통제 조치가 핵심 논점으로 부각
- 미국 광물 공급망을 ‘중국 의존에서 동맹 중심 구조로 전환’할 것을 제안
 - 또한 국가 산업정책(Industrial Policy) 차원의 대응을 통해, 광물 안보를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국가전략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

2. 글로벌 공급망 구조 및 중국의 지배 전략

□ 전략방위 핵심 광물(Strategic Defense Critical Minerals, SDCM)

-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국방·반도체·인공지능(AI) 산업에 필수적이면서 대중 수입 의존도가 80% 이상인 12개 광물을 SDCM으로 지정
 - 대상 광물은 안티몬, 비스무트, 아르센, 갈륨, 저마늄, 인듐, 천연 흑연, 희토류(Sc, Y 포함), 탄탈럼, 텅스텐 등
 - 2024년 기준 11종이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이며, 3종(갈륨, 저마늄, 안티몬)은 대미 수출금지 조치 적용. 올해 4월 중국은 추가 희토류 7종 수출통제 강화

□ 중국의 공급망 지배 방식

- 지난 30년간 중국은 일관된 전략을 통해 ‘채굴-제련-소재-부품-제품’의 완전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
 -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전략광물 공급망 지배 전략은 크게 ① 생산 통제, ② 기술 내재화, ③ 대외 확장의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됨.
 - 이로써,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전략 광물 정제·가공 단계의 70~90%를 장악. 특히 갈륨(98%), 저마늄(93%), 흑연(90%), 희토류(87%) 등 정제 비중이 압도적

〈중국의 전략 광물 공급망 지배 전략 및 조치〉

구분	주요 전략	구체 조치
생산통제	희토류·갈륨·저마늄 등 국가 전략자원 지정	외국인 투자 제한, 생산 쿼터, 환경 규제 통제
기술 내재화	핵심 가공 기술 및 경제설비 국유화	외국 기술자 입국 제한, 해외 기술 유출 금지
대외 확장	해외 광산 및 제련소 직접 인수	콩고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남미 리튬 벨트 대상 투자

[자료] Silverado Policy Accelerator

3. 주요 광물별 글로벌 공급망 구조

□ 전략방위 핵심 광물

- 중국의 전략적 자원 통제력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,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핵심 광물 대부분에서 중국이 글로벌 제련 능력의 70~90% 이상을 차지. 특히 희토류, 스칸듐, 이트륨 등 중국 제련 비중은 80~93%에 육박
 - 천연 흑연 채굴은 78%가 중국 내에서 이뤄지고, 정제 및 제련은 90% 이상 중국에서 처리됨. 중국이 갈륨과 저마늄 생산의 각각 98%, 93%를 담당

□ 이중용도 광물(Dual-use Critical Minerals)

- 리튬, 코발트, 니켈, 망간 등 이중용도 광물은 군수산업과 민간 첨단 산업 모두에 활용되는 핵심 자원으로 분류
- 생산 지역은 다양하지만, 중국 기업의 지분 참여와 제련시설 통제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가 형성

- 코발트 생산의 70% 이상을 담당하는 콩고에서는 주요 코발트 광산 18곳 중 14곳 이상에서 중국 자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 참여
- 2024년 기준 전 세계 리튬 제련 물량의 약 65%가 중국 내에서 처리되는 등, 중국이 리튬 가치사슬의 핵심 공정과 부가가치 창출 단계를 실질적으로 지배

3. 정책 제언

□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광물 수입구조 재편 필요성

- 중국산 가공 광물에 ‘전략물자’ 기준을 적용해, 비상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

□ 공급망 강화를 위해 무역-산업 정책 연계 운용

- 국내 광물 가공 및 정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직접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, 국가 차원의 생산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
- 동맹국 중심의 광물 공급망 지역화를 유도하고, 미국 내 기업이 중국산 원재료를 배제한 생산 구조로 전환하도록 유인

□ 공급망 투명성 및 인권 규제

-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전면적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「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(UFLPA)」의 강화를 제안
- 정부가 광물 수입 시 ‘광물 추적성’을 의무화하여, 세관 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출처 및 소유구조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

□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협력 강화

- 중국의 광물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, 호주, 캐나다, 한국, 일본 등 동맹국 간 공급망을 구축하고, 생산·정제·가공의 분업 구조 재편
- 기술 협력을 위해 (1) 정제 및 재활용 기술 공동 R&D, (2) 환경·노동 기준 상호인정, (3) 데이터 기반 광물 공급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

▪ 작성자 워싱턴 D.C.무역관 이정민

▪ 자료원 Silverado Policy Accelerator ([5.19](#))



(셧다운) 美 연방정부, 양당 교착으로 셧다운 장기화 및 경제 불확실성 심화

- (개요) 예산안 결렬 및 ACA 보조금 이견에 따른 셧다운 장기화

- 미 연방정부는 회계연도 종료(9.30) 이후 예산안 미통과로 부분적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으며, 양당은 예산안·의료보조금(ACA) 이견 차이로 대립 지속
-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(州)의 교통·에너지 관련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하였으며, 협상 진전이 없을 시 연방 공무원 인력 조정 가능성 언급

- (상세)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행정 공백 심화 및 경제적 영향 확대

- 셧다운으로 주요 통계 발표 지연, 공공시설 폐쇄 등 행정 공백이 확산되고 있으며, 약 190만 명 연방공무원 보수 미지급, 10월 중순 이후 군인 및 공공부문 급여 지연 예상
-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이 주요 쟁점으로, 민주당은 예산안과 ACA 보조금 연계를 주장하는 반면, 공화당은 정부 재개 이후 별도 논의 입장 고수
- 백악관 보고서는 셧다운 장기화 시 주당 약 150억 달러(미 GDP의 0.1%) 손실 발생과, 한 달 지속 시 소비지출 300억 달러 감소 및 약 4만 3천 명의 추가 실업 전망

- (반응) 양당 간 이견 지속 및 행정·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심화

- 공화당은 셧다운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, 민주당은 정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 재개 필요성 언급
- 연방공무원 노조는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, 경제계는 ▲공공 서비스 차질 ▲소비심리 약화 ▲행정 불확실성 확대 등을 우려
- 전문가들은 셧다운 장기화 시 ▲단기적 경기 둔화 ▲정책 신뢰도 저하 ▲민간 소비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지적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김기범
▪ 자료원	WSJ (10.6) 폴리티코 (10.6), NYT (10.6)

(관세) 트럼프 대통령, 수입 중·대형 트럭 25% 관세 전격 부과 발표

- (개요) 트럼프 대통령, 수입 중·대형 트럭 25% 관세 11월 1일부터 시행 발표

-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0월 1일 시행을 예고했으나, 10월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“1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중·대형 트럭*에 25% 관세를 부과할 것”이라고 발표

- *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, 미국은 '24년 200억 달러 규모 약 245,000대의 중형 및 대형 트럭 수입

- (상세) 1만 파운드(약 4.5톤) 이상 수입 중·대형 트럭 대상 광범위하게 관세 적용

- 25% 관세는 1만 파운드(약 4.5톤) 이상 수입 중·대형 차량(배달 트럭, 쓰레기 트럭, 세미 트럭, 다용도 차량, 대중교통 및 학교 버스, 트레터-트레일러 등)에 광범위하게 적용* 예정

- * '25년 4월, 상무부가 해당 수입 중·대형 트럭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착수

- 미국은 대부분의 대형 트럭을 멕시코*에서 수입하고 있으며, 캐나다가 두 번째로 큰 공급원으로 미·멕시코·캐나다 협정(USMCA)에 따른 예외 적용** 여부는 불확실

- * 대형 차량의 멕시코 수입량은 2019년 이후 3배 증가한 약 340,000대 기록('25년 1월)

- ** 현행 규정에 따라, 멕시코·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경트럭은 미국산 부품가치 공제를 관세에 반영

- EU·일본은 무역협정에 의거, 자동차·자동차 부품 15% 관세에 합의했으나, 동 조치에 따라 EU·일본 산 중·대형 트럭에는 25%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음.

- (반응) 미국 제조업계 ‘국산 생산 보호에 긍정적’, 주요 수출국 실질적 부담 우려 표명

- 포드(Ford), 자사 트럭의 전량 미국 내 조립을 강조하며 관세 환영. 일부는 국가안보 명분에 일부 동조하면서도 트럭과 부품 가격 인상, 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도 주목

-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상위 5개 대형 트럭 수입국(멕시코, 캐나다 일본, 독일, 핀란드 등)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, 관세 철회 촉구

▪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James Lee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▪ 자료원	폴리티코 (10.06), 로이터 (10.07)
-------	---

(의약품) 美 상원의원, 외국산 제네릭·원료의약품의 232조 관세 확대 제안

- (개요) 의약품 공급망 안정 및 안보 강화를 위한 232조 관세 검토 요청

- 릭 스콧 상원의원(Rick Scott, 공화)은 중국·인도산 제네릭 및 원료의약품(API)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이 국가안보상 취약 요인이라고 지적하며, 232조 관세 적용 검토 촉구
- 제네릭·원료의약품·중간원료(Key Starting Materials)에 대한 단계적 또는 즉각적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, 12개월 내 브랜드의약품과 동일한 관세 체계 전환 필요성 강조

- (상세) 외국산 의존 신화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 및 국내 생산 촉진 필요성 부각

- 미국 내 처방 의약품의 약 90%를 차지하는 제네릭 중 70~80%가 중국·인도산 원료에 의존하고, 전체 의약품의 약 75%가 해외에서 공급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 존재
- 스콧 의원은 제네릭·API·중간원료(Key Starting Materials)의 단계적 또는 즉각적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, 12개월 이내 브랜드의약품과 동일한 관세 체계 전환 필요성 강조
- 항생제, 항암제, 혈액응고제(heparin) 등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미국 보건 안보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, 중국의 의약품 공급망 전략적 활용 가능성 경고

- (반응) 산업계, 제네릭 산업 수익성 악화 및 약가 상승·공급망 차질 우려 표명

- 제네릭의약품협회(AAM)는 낮은 수익구조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원이 상승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시장 내 의약품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표명
- 업계는 약가가 정부 및 보험 보상 체계에 규제되어 있어 관세 부담을 시장가격에 전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, 중소 제약사의 생산 전환 부담 및 투자 위축 가능성 제기

■ 작성자	워싱턴 D.C. 무역관 정연호
■ 자료원	CPA(10.7), 인사이드(10.6)

(무역)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(CPA),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한 연대 출범

- (개요) 미 산업 연합, 체계적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한 연대(Alliance) 출범 발표
 -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(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), 미 산업 전반에 걸친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한 즉각적 무역집행을 위한 산업 연대* 출범(10.6)
- (상세) 산업 전반 무역 사기에 대한 산업계 공동 대응 및 집행 결과 투명성 확보 촉구
 - (배경) '18년 이후 301조 관세 회피로 약 1,940억 달러의 정부 수입 손실 발생, 이외, 다양한 무역법(232조, 201조, IEEPA, AD/CVD 등) 관련 관세 회피 사례 급증
 - (목적) 체계적 무역 사기(관세 회피, 허위 신고 등)에 대한 산업계 공동 대응 및 법 집행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실질적 개선 요구

〈산업 연대의 즉각적 조치 우선순위 요구사항〉

우선순위	상세 요구사항
공공 집행 점수 카드(scorecard) 공동 개발 및 정기적 업데이트	'25년 1월 15일까지 공공 집행 점수 카드 공동 개발·정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기소된 사건 수, 회수 금액, 형량 집행 등 결과 공개
미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법('25) (PAIL) 통과	PAIL(Protecting American Industry and Labor) 법안 통과로 연간 2천만 달러 예산의 무역 범죄 전담 부서 신설 및 법무장관 보고 의무화
무역 부정행위 방지법 통과('26)	무역 부정행위 방지법(Fighting the Trade Cheats Act) 통과로 AD/CVD 적용 기업의 민사소송 권한 부여, 피해 회복·집행 속도 향상
통관 정보 현대화법 통과	통관 정보 현대화법(Manifest Modernization Act) 통과로 모든 운송 수단(해상·항공·육상·특송) 대상 데이터 표준화 및 투명성 강화
비거주 수입업자(NRI) 승인 종료	미국 내 거주 수입업자 또는 연대 책임자 지정을 통해 비거주 수입업자(Non Resident Importer) 허점 방지 및 처벌 강화

[자료]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(CPA)

- CPA 회장 Zach Mottl, '미국 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은 산업 기반 재건과 장기적 번영을 위해 필수적'이라고 언급

-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 D.C. 무역관 문현주 |
| ▪ 자료원 | CPA 홈페이지(10.6) |

▣ 의회법안 동향

구분 (현행일)	법안 (발의일)	대표 발의자	법안 및 주요 내용
AI 정책 (9.30)	S.2950 (상) (9.30)	John Cornyn (공)	<p>〈외국 사이버 사기 범죄 대응법〉</p> <p>*Scam Compound Accountability and Mobilization (SCAM) Act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개요)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초국경 범죄집단의 사이버 범죄, 인신매매 등에 대응하기 위한 TF 신설 ■ (상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무부에게 미 검찰, 재무부 등과의 범부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책*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△사이버 사기 범죄 예방 △동맹국 정부 및 법 집행기관의 대처 역량 강화 △범죄 피해자 지원 △사기범죄 집단을 용인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등 - 관련 TF 신설 및 IEEPA에 의거한 제재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
중국 견제 (10.1)	S.2960 (상) (10.1)	James Risch (공)	<p>〈대만 방어를 위한 中 대응 법안〉</p> <p>*Deter PRC Aggression Against Taiwan Act to Defend Taiwan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개요) 중국의 대만 관련 잠재적 긴급 상황에 대비해 경제 제재 및 무역 제한 등 대응 수단에 대한 다자 간 협력 강화 추진
청정에너지 (10.3)	H.R.5673 (하) (10.3)	Nanette Baragan (민)	<p>〈에너지부 종료 보조금 복원 법안〉</p> <p>*To reinstate all financial assistance awards terminated by the Department of Energy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개요) 일괄 종료된 총 76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프로그램등에 대한 전액 복원을 규정하는 법안

* 미국 동부 시간 10월 7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Gold Prices Top \$4,000 for First Time (금값, 사상 최고치 '4천 달러' 경신)</p> <p>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금값은 사상 최초로 트로이온스盎 4천 달러 까지 급등해.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등의 지속적인 금 매입에 따라 금값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혀</p>
The Washington Post	<p>Furloughed workers not guaranteed back pay after shutdown, OMB claims (예산국 "임시 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할 의무 없어")</p> <p>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임시 휴직 근로자에게 셧다운 종료 후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으며,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근로자가 급여를 받게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해</p>
The New York Times	<p>Flight Delays Begin as Air Traffic Staffing Shortages Worsen (셧다운 여파...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)</p> <p>미국 교통부 장관이 셧다운의 여파가 항공편에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관제사 부족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. 관제사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셧다운이 종료된 후 체불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 받고 있어, 셧다운 기간동안에는 관제사들의 병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가 목격돼</p>
CNN	<p>Supreme Court's conservative majority prepared to rule against conversion therapy ban (대법원, 전환 치료 금지 관련 위법 판결 전망)</p> <p>콜로라도주의 미성년자에 대한 "전환 치료(conversion therapy)" 금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사 대다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위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돼</p>
Axios	<p>How Trump could use the Insurrection Act to send troops to American cities (주방위군 배치...반란법으로 가능해)</p> <p>1987년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 하 미국 영토 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,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"반란법을 제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"고 언급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데 있어 반란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</p>

* 미국 동부 시간 9월 25일 16시 기준

워싱턴 D.C. 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경제통상리포트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5-36	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	2025.09월
US25-35	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	2025.09월
US25-34	'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	2025.09월
US25-33	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9월
US25-32	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('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)	2025.08월
US25-31	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8월
US25-30	미 풀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	2025.08월
US25-29	미 미소기준(De Minimis)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08월
US25-28	미 정부 『AI 행동계획』 행정명령 발효 -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8월
US25-27	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5.07월
US25-26	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	2025.07월
US25-25	미 최초 암호화폐 법안(Genius Act)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5.07월
US25-24	트럼프 행정부,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	2025.07월
US25-23	PIIE,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	2025.07월
US25-22	미·중 무역 프레임워크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	2025.07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사-23 (2025.8.26.)		
코인사-22 (2025.5.13.)		

문의	이메일	전화
	jwshim@kotra.or.kr	+1) 202-857-7919
	shim.nature@kotra.or.kr	

2025 Korea-US IP Forum

Date/Time October 8th (Wed) 2025, 12:00PM-5:00PM (EST)
Venue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, 122 E 32nd St, New York, NY 10016
Hosted by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/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
Organized by KOIPA U.S. Capital IP Center / KIPRO PCT Korea Center | Partnered with KOSME

TIME	PROGRAM		SPEAKER	
12:00-1:00 PM	Registration & Networking			
Opening Ceremony	1:00-1:10 PM	Opening Remarks	안세영 (Sarah Ahn)	Economic Minister, Korean Embassy
	1:10-1:20 PM	Congratulatory Remarks	Charles Kim	USPTO Deputy Commissioner for Patent
1:20-1:30 PM	Photo Session			
SESSION I <small>Corporate Growth & IP</small>	1:30-2:00 PM	Seeing the Full Picture: Capturing Value Through IP	Russ Jacobs	Director, Managing Corporate Counsel, Starbucks
	2:00-2:30 PM	Design Strategies for Corporate Growth	Dunstan Barnes, Ph.D.	Partner, MBHB
2:30-3:00 PM	Coffee Break by Starbucks			
SESSION II <small>(IP) Acquisition & Litigation</small>	3:00-3:20 PM	Considerations for Filing and Prosecuting US Patent Applications	Jennifer Chheda, Ph.D.	Partner, Jones Day
	3:20-3:40 PM	Converging Currents: Korea's Evolving Patent Litigation in a Comparative Context	권보원 (Bowon Kwon)	Judge, IP High Court of Korea
SESSION III <small>Gov. Support</small>	3:40-4:00 PM	US IP Policy Directions & Corporate IP Strategies	한민열 (Manyeol Han)	Counselor for IP, Korean Embassy
	4:00-4:20 PM	Overview of S. Korea's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	김성근 (Sung Keun Kim)	Minister Counselor for Competition Affairs, Korean Embassy
Closing & Consultation	4:20-4:25 PM	Introduction to KOIPA US Capital IP Center	오승혜 (Sunghye Oh)	Director, US Capital IP Center
	4:25-4:30 PM	PCT Service of Korea	이현경 (Hyun Kyung Lee)	Director, PCT Korea Center
	4:30-4:35 PM	Introduction to KOSME Global Business Center	백성우 (Sungwoo Baek)	Director, KOSME GBC-NY
	4:35-5:00 PM	On-site Consultation	김윤하-오승혜(IP) 이현경(PCT) 김성근(경쟁) 손재령(노동) 김한준(중소기업)	



Korean Intellectual
Property Office



Embassy of
the Republic of Korea



U.S. Capital IP Center



PCT Korea Center